

# “기존 주민과 함께”…영등포 쪽방촌, 3천억 투입해 탈바꿈

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원주민 영구임대주택 · 청년 행복주택

김현미 “쫓겨나는 개발 아닌 따뜻한 개발” 강조

50년된 서울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1200가구가 밀집한 주거와 상업, 복지타운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약 1만㎡를 개발해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의 주택을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한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은 1.65㎡~6.6㎡(0.5~2평)의 주택에서 살며 월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가구 당 16㎡(4.8평), 임대료 월 3만2000원 수준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주민들을 인근 이주단지에서 임시 거주하도록 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지역으로 재입주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이 사실상 최초 도입된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220가구가 포함된다. 분양주택 600가구를 공급하고 상업시설도 수용해 수익성도 안배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며 “쪽방촌 주민들을 존중하는 ‘최초의 개발’이며, 이분들을 우리의 당당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사회 재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쪽방촌 재입주)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행복주택도 만들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함께 사는 곳이 될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들끼리 고립돼서 살던 공간이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기존 주민들도 활기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 효과도 노린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영종로 노점점비(2019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20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2021년), 신안산선(2024년 개통) 사업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영등포구를 훌륭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영등포 쪽방촌 부근에 살았다”며 “작은방에 지취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기에 이 주변이 얼마나 허름하고 인간적으로 어려운 곳인지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영등포는 종로, 강남에 이어 서울의 ‘3회’ 중 하나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핵심지역”이라며 “개발로 인해 그동안 살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삶이 더 나아질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하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영등포를 제외한 전국 9개의 쪽방촌도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활용된다.

실제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독거노인 쪽방촌을 도시재생사업(재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



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자자체와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총 298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수익성 확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 사업은 LH, SH 같이 투자해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인봤던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보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쪽방촌과 인접한 영등포 집장촌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관심거리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집장촌은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 병행해 사업을 검토 중이며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 수렴해 영등포구 쪽방촌, 집장촌을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주, 자주재원 1조5000억원 시대… 지난해 1조5195억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1조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는 2019년 제주도세 세입 마감 결과 1조5195억원을 징수, 당초 목표 1조5001억원 대비 194억 원 초과달성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년도 징수액 1조4590억원 보다 605억원 더 징수했다.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을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000억원을 넘어서졌다.

초과세입 달성요인을 보면 지방

소비세율 4% 인상(11→15%)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범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 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원을 세수를 확보했다.

증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

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원을 확충했다.

또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원을 추징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1조5611억원으로 설정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15→21%)에 따른 지방소비

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 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부동산 가래 감소, 경기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초과실적을 세입 결함 없이 달성했다”며 “올해에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박물관 역사관 재개관

울산박물관 역사관 전경. 울산박물관은 전시진열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유물 일부를 교체해 21일 재개관한다.

## 정부, 1865억원 투자해 평택항 연결 ‘평택 국제대교’ 준공

행정안전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 준공식을 20일 개최하고 22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택항 개발,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및 이화·삼계간 지방도 건설, 방음시설 설치 등 총 19조 규모의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원하

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평성·송탄 국제교류센터, 평성·북부 복지센터, 안정·신장 소평돌정비 및 공원건설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평성읍과 포승읍을 잇는 총 연장 11.7km의 도로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평택지역개발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2763억원 중 2570억원이 투입됐고, 올

해도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되는 평택 국제대교가 포함된 평택호 횡단도로 2공구는 국비 1865억원이 지원될 사업이다.

2017년에 개통한 1·2공구와 연계해 미군기지와 평택호 관광단지 및 평택항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물류비용 절감·평택항 배후단지 및 관광시설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남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최대 30% 아껴요”

경기 성남시는 올해 2억 원(국비 50%, 도비 15% 포함)을 투입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시내·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당 250~45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까지 아낄 수 있게 한 것이다.

한 달에 44번 사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모바일 앱을 사

용하면 된다.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10%가 추가 할인된다.

일반버스 이용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 광역버스 이용자는 월 최대 1만98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부 충주에 거주하며 한평생 선비정신을 품구해 온 문단 원로 강준희 작가(86)가 장편소설 ‘촌놈’을 출간했다.

강 작가는 1978년 3년간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 ‘이단의 성(異端의 城)’을 40여년 만에 다섯 권으로 묶어 펴냈다. 책에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거치는 시기에 기자와 택시기사로 일하는 한 청년의 고뇌와 사랑을 그렸다.

작가는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시대에 지조 있고 개척한 삶을 회구하는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을 주인공 석우진에게 투영하고 있다.

## 위폐 판별기술로 ‘총독부 기록’ 복원

국가기록원, 이미지비교감식기 활용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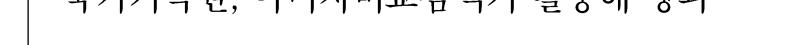
판독 조건 - 광원 : 자외선 254 nm, 필터 : Longpass VIS

< 감사원 기록물(1966년) 디지털 복원 전 · 후 >



판독 조건 - 광원 : 자외선 312 nm, 필터 : Longpass VIS

< 감사원 기록물(1966년) 디지털 복원 전 · 후 >



판독 조건 - 광원 : 자외선 312 nm, 필터 : Longpass VIS

정·보존·복원 처리결과 분석 및 이미지화에 폭넓게 쓰이는 장비다.

이번 기술을 적용해 복원된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153매, 감사원 문서 375매 등이다.

1944년에 생산된 형사사건부는 침수로 인해 텔색이 진행된 기록물이었는데 적외선과 자외선을 비추어 532건(153매)의 사건 제목과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성명 등 중요 내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이나 패시밀리용지 같은 감광지나 감열지 재질에서 희발·탈색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기록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정할 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해 이를 기록물 복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록원은 문서 감정, 위조지폐 판별 전문장비인 이미지비교감식기(VSC)를 도입, 기록물 복원에 활용해 첫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비교감식기’는 국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민간은행 위변조감정센터, 국외 하버드대 미술관, 스미소니언연구소 등에서 문서나 화폐의 위·변조, 감